

# 現 중3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 교육계 ‘혼란’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조희연 교육감

“학교 폐지권한, 시·도교육청에”

특목고 폐지 강력 드라이브 예고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대입준비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에 따라 올해 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시 타지역 일반고로 배정되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 폐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후 자사고 등 특목고 운영은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난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수험생들은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중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다.

현재는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시 지원하지 않은

타 지역 일반고로 배정되는 불이익을 주도록 해 특목고 입시 과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현재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미시적 선발 특권 제한이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특목고 폐지 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에서 “현재의 위헌소송이 판결나기 전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는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문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

생들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자사고 학생 선점권을 유지시킴으로서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특목고가 고교의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지난 4년간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발 시기를 통일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해 자사고의 학생 선점을 막는 차선책을 선택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자사고의 학생 선발 제한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으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본안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9년 입시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결”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본안 판결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즈음해 저의 입장은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동시 전형 같은 자사고 선발특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한정하지 말고,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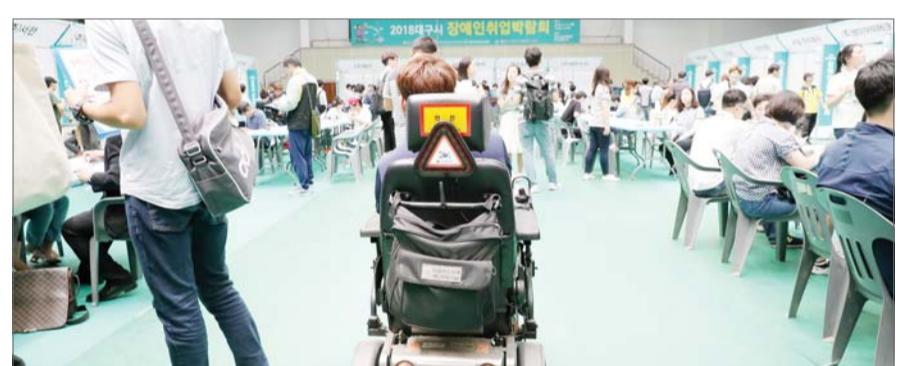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권 학교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배분 한다는 원칙은 현 정권의 입장”이라며 “자사고에 대한 정책 역시 시·도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자사고 설립과 폐지 등의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권학교인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했는데,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현재 결정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등 과거 정부 때부터 운영되면서 교육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보다는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달 21일 오후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활체어를 탄 참가자가 참가 기업 부스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2100개 만든다

교육부 대학 내·지역사회 등

정부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를 2115개를 만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고용부가 지난

4월 25일 체결한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대학 내 일자리 35명, 지역사회 일자리 580명, 재정지원 일자리 1500명 등 총 2115명에게 맞춤 일자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내 일자리는 2018년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발굴해 2019년 모든 대학으로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

/한용수 기자

## ‘조희연 시대’ 2기 개막… 첫 일정은 일일교사

### ‘첫 재선 교육감’… 오늘 취임식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제21대 서울시교육감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재선 교육감은 조 교육감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직원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 교육감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취임선서에 이은 취임사를 통해 ‘힘찬 출발과 새로운 비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취임식 꽃다발 증정은 서울시교육청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성 공시대’의 일환으로 시행된 2016 기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공식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임식 후 오후에는 용산구 서울시 빙고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교사로서 3학년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친구를 소개해요’라는 수업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수업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개발한 동물복지교육 교재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 교육감 출범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모두를 아우르는 공감 교육감이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제를 보다 더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많은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간섭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 기자

## 전남대·충남대 병원, 교육 공공기관 경영평가 ‘A’

### 공공성·경영혁신·상생 등 평가

교육부는 소관 19개 기타공공기관의 2017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3곳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과 최하 E등급(아주미흡)은 없었다.

평가 결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등 2곳은 D등급(미흡)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모든 기관의 올해 지적사항 개선 여부는 내년도 평가

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9개 국립대병원과 3개 기관 등 12개 기관은 B등급(양호)을, 경북대병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2곳은 C등급(보통)을 받았다.

이번 평가 대상은 14개 국립대병원과 5개 교육분야 연구기관으로, 흥길표 백석대 교수를 단장으로 20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경영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됐다.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경영혁신,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 채용비리 등 감사결과도 반영했다. 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박준란 교육부차관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등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채용비리 제도 개선, 성희롱 및 성폭력 균절, 청렴도 제고 등 현안에 대해 기관장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건국대 창업기업 마케팅 강의 수강생 모집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과 일반인, 초기단계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2기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마케팅의 이해’ 수강생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비즈니스 디자인을 활용한 아이템 확인, 초기창업기업의 마케팅 기법과 활용, 마케팅 전략 및 시장마트리스 작성 등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가장 큰 장점은 콘텐츠 제작자·마케터들과 함께 페이스북·인스타·유튜브 등 S

NS 마케팅 방법을 이해하고, 창업아이템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실습이 진행되며 피드백과 멘토링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을 이수하면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지원단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사후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의 서류평가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한용수 기자